

# 약학대학 계약학과 '유명무실'

### 올해 운영중인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 0명에 그쳐 유성엽 의원 "보건 의료 현장 필요 약사양성 방안 시급"



지난 2011년 약사 증원시 신설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유성엽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7천 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약개발과 보건 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계약학과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다.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교육부 지정인원은 100명이었으나 23명은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수년째 극소수였다.

정원 77명 중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약학 관련 기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서 기인한다. 우선 계약학과 입학 조건 충족이 어려운 데다, 기업의 입장에서 약학 관련 기업이 재직 직원에게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

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입장에서 기업의 4년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기업 지원 비용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약학대학 계약학과와 부실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해 11월 유성엽, 김광수, 양승조 의원이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약개발 인재양성 포럼'에서 나온 약대 계약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 보건, 교육당국에 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바 있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존 계약학과 운영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계약산업의 발전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약학대학 계약학과 현실적 지원기준 및 운용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유

명무실하여졌으므로 약대 계약학과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 전환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 따라 약대 증원인원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약대 신설이 이뤄진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어 정책 조율가능이 마비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증강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 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수년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와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성 기자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구급대원 상해시 가중처벌

### 김광수 의원,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발의 상해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



지난달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중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8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폭언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적 처치가 존재하면서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솥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

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재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력(爲勢)·위력(爲力)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하고,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함께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구급활동의 현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조·구급대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문 대통령 "지역주의·분열정치 이제 끝... 30년 노력의 결과"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새로운 정치 마련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혼자선 할 수 없는 일 하나의 팀 돼 잘해준 덕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 통해서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그런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색깔론으로 국민의 편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런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도 이제는 더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로서는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이자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며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말 뜨거웠던 그런 일이고, 3당 합당 이후 약 30년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면서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에 의지하는 분열의 정치를 벗

어나야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면서 "이번에 아주 높은 투표 참여와 정말 성숙한 주권자 의식으로 새로운 정치를 마련해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 비서실 모두와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 개인이다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온당치 못한 얘기"라

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면 그것은 함께 한 청와대 비서실이 아주 잘했다는 것이고, 함께 한 우리 문재인정부 내각이 잘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한국당, 중앙당 해체할 것"

###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전국 당 자산 처분"

6·13 지방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이 18일 중앙당을 해체하고 전국에 흩어진 당 자산을 처분하는 등 대대적인 수습방안을 내놨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하겠다"며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 위원장을 맡아서 중앙당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집권당 시절의 방대한 조직구조 다 걷어내고 원내 중심 정당 정책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갈 것"이라며 "중앙당 조직을 원내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에 조직과 기능을 필수적인 기능 위주로 설립해 간결한 의사결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앙당사를 공간적으로 최소화하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당 자산을 처분해 당 재정운영 또한 효율화하겠다"며 "당 자산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당 조직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해나가겠다. 당 이념과 철학 혁신과 더불어 조직 혁신도 맞물려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 이후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 본부장, 당대변인과 여의도연구원 등 우리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혁신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구태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 민주, 8월 25일 전당대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전당대회는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당무위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등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자와 장소는 확정됐고 향후 전당대회에서 구성될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정당발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았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통합 선거나 분리선거를 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지도 체제 결정 시점"에 대

해서는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의 건도 아직 실무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안됐다"고 부연했다.

전준위가 꾸러지면 지도체제 개편과 지도부 선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주로 원 구성, 야당과 협치, 전열 정비 등에 대해 얘기가 나왔다"며 "더 해야 할 것은 전준위 구성, 조강특위 구성, 지도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등이다)"라고 했다.

한편, 당 대표 후보로는 김진표, 송영길, 전해철, 이해찬 의원 등 10여명이 거론된다.

/뉴시스

## 380억 규모 익산 황등 배수개선사업 농식품부 선정



익산시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황등호 복원이 본격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은 총 사업비 380억 규모의 황등 배수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조사를 마친지마자 신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평이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시 황등면과 삼기면, 임상동, 신음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탐천과 기양천 주변 684ha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의 영농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토양침식 방지와 재해 예방 등 주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익산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인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이춘석 의원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사업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4년 기재부를 설득해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 받고 기본조사에 착수했으나, 기본조사에만 4년이 걸린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올 초 신규지구 선정을 앞두고 농식품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침수 위험지역인 망성면 일대 화산2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관심을 촉구한 결과 올해 기본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이끌어 냈다.

/익산=우병희 기자